

코스피	2505.86	코스닥	684.85
	(-15.53)		(-6.60)
금리 (미국 9년)	4.584	환율 (원/달러)	1464.00
	(+0.003)		(-7.90)



더 센 '상법 개정안' 온다

野 “집중투표제 등 더해 재추진”

한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에 野 “감사 확대 포함해 다시 추진”
경제계 “상법개정안 입법 되면 기업 소송 시달려 경영 못할 것”
벤처기업 절반 “부정적 영향”



2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거나 독립 이사로 개편하거나 감사 확대하는 조치까지 포함해 상법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업 활동의 손발을 다 묶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상법 개정안에 집중 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더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경제가 심각한 내우외환에 처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끊이지 않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결이 불발될 경우 ‘집중 투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거나 독립 이사로 개편하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까지 포함해 (상법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지배 주주에 의해 아주 불공정하게, 불투명하게 운영돼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 주주가 많은 피해를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외국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숫자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현행 ‘단순 투표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될 수 있다. 재계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이사회 내부의 분리선출 감사위원 숫자를 현행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주주에 대항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늘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계는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기자본이 감사위원회 장악력을 키우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에 경제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상법개정안 재추진 여부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직 선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도 “상법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기업들은 미래 경영전략보다 손해 배상청구에만 시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내 벤처기업 절반 정도가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로 ▲경영권 침해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 다양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벤처기업협회가 이날 발표한 상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벤처기업의 절반이 넘는 54.7%가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답변은 14.7%였고, 28.4%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의무화)’에 대해선 38%가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긍정적’은 25.4%, ‘영향없음’은 33.8%였다. 이번 조사에는 총 169개사가 참여했다. /김승호·양성운·서예진 기자

bada@metroseoul.co.kr

“K-방산 미래 먹거리 확대 50조규모 무인기시장 공략”

한화에어로, 유증 발표후 첫 투자 GA사와 단거리무인기 개발 협력

방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한화가 무인기 체계 사업에 진출한다. 지난달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 발표 후 첫 투자로, 미래먹거리 확대를 위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결단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무인기 전문 기업인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ASI·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 Inc.)’과 단거리 이착륙(STOL·Short Take-Off and Landing)무인기 ‘Gray Eagle-STOL(GE-STOL)’의 공동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GA-ASI는 MQ-1 프레데터, MQ-9 리퍼 등 고성능 무인기 개발 및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방국들에 무인기를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 고정익 무인기 전문기업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무인기 역량 확보는 자주국방과 K-방산의 미

래 먹거리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첨단 방산 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양사는 무인기의 기획·설계·개발부터 체계종합·생산·운용·판매까지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GE-STOL’은 이착륙 거리가 최대 수백 미터에 불과해 단거리 활주로, 비행갑판을 갖춘 대형 함정 및 활주소가 없는 야지 등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하다. ‘탑재 가능 중량(payload)’은 1.6톤(t)으로 장비에 따라 정찰, 공격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향후 무인기 플랫폼 공유를 통해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A-ASI 무인기 제품을 운용 중인 국가들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향후 10년간 600대 이상의 GE-STOL의 구매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 지원을 제외한 단순 구매만으로도 15조원 규모의 수출 물량이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韓 車·반도체’ 조준... 관세 방아쇠 당겼다

美 백악관 상호관세 세율 공개 우리나라 총 수출액 급감 우려

미국 백악관이 3일(한국시간) 새벽 교역상대국에 매길 상호관세 세율을 공개하며, 바야흐로 관세전쟁이 본격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수입대상국에 10~20% (중국 60%) 상당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무역적자국인 만큼, 우리 경제는 어느정도 타격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미 상무부 집계 따르면 대(對)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660억 달러(96조 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일본(7위)에 이어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에 올라 있다. <관련기사 3·4면>

한국과 미국은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상호 간 무관세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이와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는 멕시코·캐나다에 이미 25%의 보편관세를 부과했다. 한 달간 적용 유예 중이지만 미 행정부가 방침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유럽연합(EU) 등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줄곧 화두로 꺼냈다.

우리나라로선 향후 자동차 수출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6일 자국 시장 외에서 생산된 자동차 및 경트럭에 25%의 관세를 물린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708억 달러(103조 원)를 기록했는데 이 중 대미 수출액이 342억 달러(50조 원)에 달했다. 고율의 관세가 없어지면 현대차 등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역시 우리로선 큰 부담이다. 그간 국내 자동차·부품 기업은 일정 비중의

완제품을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멕시코에서 생산한 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을 활용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차량을 수출해 왔다.

지난해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2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대미 수출액(1278억 달러)의 4분 1을 넘었다. 이에 자동차 부문 관세 부과는 국가 총 수출액의 급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미국은 반도체·의약품 등에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해 왔다. 이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업체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산업연구원은 관세 10% 부과 시 대미 반도체 수출이 5.9% 줄고, 25% 부과 시 감소 규모가 10% 선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가공식품 줄인상... 물가 3개월째 2%대

3월 소비자물가 지수 2.1% 상승 김치·커피 등 가공식품 크게 올라

소비자물가가 석 달 연속 2% 이상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물가 인상을 주도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29(200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9~12월 1%대 인상을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1월 2.2%, 2월 2.0% 상승하는 등 1분기 내내 2%대로 오른 상태다.

특히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3.6% 상승,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전체 물가를 0.3% 포인트 끌어올렸다. 김치(15.3%), 커피(8.3%), 빵(6.3%), 햄 및 베이컨(6.0%) 등 인상폭이 컸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지난해 1%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1월 2.7%, 2월 2.9%에 이서 3개월 연속 인상이 커졌다.

반면,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1.3% 내려, 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2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난달(-1.4%)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다만,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물은 0.9% 상승했다. 농산물은 1.1% 하락했으나, 축산물(3.1%)과 수산물(4.9%)은 오름폭이 컸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2023년 8월(6.0%) 이후 19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2월(0.8%)에 이어 1.4%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사립대 납입금이 전년대비 5.2% 오른 효과로 분석했다. 외식물가는 3.0%,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3.2% 각각 상승했다. 전체 개인서비스는 1년 전보다 3.1% 인상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전직 국회의장들, ‘개헌’ 강조... ‘윤 선고’ 여야 승복 요구도
▲부산에 마련된 장제원 빈소... 정진석 “윤 대통령 ‘너무 안타깝다’”고 말해 /사진 뉴시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합성생물학 육성법’ 국회 통과
▲여 김건, ‘국제 탄소시장 개막에 따른 대응’ 토론회 개최

▲국회,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의결... 성착취물·그루밍 범죄 처벌 강화
▲어업인 부과 ‘수산자원 조성금’ 폐지... 해수부 소관 법률안 13건 본회의 통과